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10
제66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87회 임시회 폐회



03

주요 이슈



08/0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탈권위, 도민과 더 가까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87회 임시회에서부터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단상을 낮춰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연말 실업대란 우려, 민생 경제 부양책 총력전 펴야” 제388회 임시회 개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8일부터 29일까지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좌남수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코로나로부터 도민안전을 지키고 피폐해진 민생 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경제 활력으로 제주를 살리는 정책 행감이 돼야겠다.”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도민의 입장에서 민심을 잘 반영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통찰해 생산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겠다.”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 있는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연말 실업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민생경제 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사회에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연일 발표되는 제주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우려가 크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이라며, “생산과 소매판매는 물론 건설수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당초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제주도 현지 국정감사 일정



을 20일 행안위 회의실로 조정하면서 임시회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1일 연장된다.

● 폐회사

“내년도 예산, 가용재원 총동원 각오 나서야” 제387회 임시회 폐회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9월 25일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민생대책을 잘 세워야 겠지만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도정 및 교육행정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무엇보다 제주도가 당면한 재정 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에 있어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설익은 추진으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좌 의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기금마저 여전히 융자금리가 높

은 건 문제”라면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행정시에선 더 큰 일”이라며, “법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액 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불황으로 어렵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 의장은 “몇 천억 원씩 투입되는 도지사 공약 사업 보다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



소해주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도 지금의 갈등 사태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의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발언으로 나설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 5분 발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화 절실”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9월 2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사업종료를 앞둔 도시재생사업이 그 어떤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 하며 이 자리에서 섰다.”며,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도시 간 균형발전,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원도심이 도시재생사업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장 부유한 마을,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 지역공동체가 회복돼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심어줬다.”며, “하지만 이런 환상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 공간에 콘텐츠를 자력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깊어만 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 참담…현실대응 노력 촉구

고은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교육의원들이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9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2번이나 보류됐다.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 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민 갈등과 사회적 합의 필요가 심사 보류 이유였지만 교육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나.”라며, “이제 와서 교육청의 직무 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조례 청원을 위해 한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제주 교육의원체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폐지를 논하는 의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해주실 것을 요청된다.”고 피력했다.

도의회-제주도,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스타트

제주미래 좌우, 도와 의회가 함께 나서는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는 10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조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통틀어 6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도와 우리 도의회는

합동으로 또 하나의 제주비전인 ‘제주형 뉴딜’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제주 발전, 도민 행복을 이루려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왜 의회가 같이 하느냐 의아해 하시는 도민들이 계시죠. 뉴딜 정책은 제주의 미래를 바꾸 놓을 사업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와 의회는 분명 기관대립형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대립을 뛰어넘어 협치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좌 의장은 “오늘 제주형 뉴딜 정책 발표를 계기로 도와 의회는 국가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며, “제주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주요이슈

제주도의회,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3관왕' 박원철 의원 '최고위원장상' -김경미·문종태 의원 '최고의원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의원이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10월 6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박원철 의원이 최고위원장상, 김경미·문종태 의원이 최고의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공적서를 통한 1차 서류심사, 2차 서면 및 전화인터뷰 심사를 종합해 3차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은 6일 낮 1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군호텔(사파이어홀)에서 진행됐다.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한 박원철 의원(한림읍)은 2010년 9대 의회 때부터 세차례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1대 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제2의 강정해군기지와 같은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제주도정과 국회 및 청와대까지 갈등해소에 모두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상하수도를 비롯한 쓰레기 문제 등 환경과 쾌적한 도시를 일궈내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조기 추진 동력확보를 이뤄내는 등 제주의 청정환경과 쾌적한 도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최고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해 11대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여성 및 장애인 권익향상과 학교 밖 학생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고의원상을 함께 수상한 문종태 의원은 원도심인 일도1·이도1·건입동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11대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원도심 출신 의원답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광장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역사·문화·쇼핑 중심지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원도심 내의 동문재래시장 및 중앙로 지하상가 등 소상공인 지역상권 살리기와 제주시민회관을 시민복합커뮤니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11대 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역량강화 노력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에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심사해 시상해오면서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007년도 제1회 의정대상 단체부문 종합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제4회를 제외하고 계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 수상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의회 평가 전문기관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 도민 소통 위한 민생의정 강행군 직능단체별 잇따라 간담회 주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생의정'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각 분야별 현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월 6일 수산분야를 시작으로 농업분야(10.7.), 경

제분야(10.8.), 사회복지분야(10.12.)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등 분야별 현안 의견을 청취했다.

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 고충 해결을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제기된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 최종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위원장 이예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의 임기(2018.10.16.~2020.10.15.)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옴부즈맨 활동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2년간 옴부즈맨 활

동에 솔선수범한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활동 부문에는 김형준(효돈), 이금월(이도2), 김세시리아(일도2) 옴부즈맨이, 우수 제안·제보 부문에서는 김원배(이도2), 공성호(표선) 옴부즈맨이 선정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4기 옴부즈맨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졌다. 비록 임기는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주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5기 도의회 옴부즈맨은 읍면동별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이달 말 새롭게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운영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 필요성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등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9월 23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회의 의사일정 협의, 윤리강령 조례안, 도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조례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협의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서의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정홍보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와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분과 의정자문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9월 23일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 및 의정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9월 4일 위촉 이후 처음 갖는 자리로 의회운영분과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과위원장 선출 및 상호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을 통해 교원, 전직 공직자, 사회자생단체장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1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 4회(분기 1회)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자치입법, 정책, 제도에 대한 제안,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에 의회운영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범 위원장,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 ‘수석부의장’ 선임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9월 2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수석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 ▲지방의회 인사 청문 제도의 법제화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선임된 4명의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된 김용범 의원은(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차원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라

고 상기시키면서, “의정경험을 살려 전국의 지방의회와 소통하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실무기구로 ▲시·도의회간 공동이해 관련 사항을 사전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며, ▲정보교환 및 주요현안 협력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웰니스 관광으로 관광·경제 회생 전략 마련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연속토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0월 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고, 더군다나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은 초도화되었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 관광대응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한다.”라며, “코로나이후 새로운 관광형태로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관광트랜드가 비대면, 건강, 안전, 청정과 힐링관광으로 바뀌고 있는데, 웰니스 관광지로 제주를 새롭게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웰니스관광을 주제로 한 제주지역 토론회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 코로나 종식이후 변화될 관광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발빠른 전략마련을 위해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안창남 위원장 또한 “제주형 웰니스관광상품 개발지원과 육성은 민선7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데, 이제서야 제주 웰니스 관광 15선을 선정하며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제주관광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웰니스 관광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상품개발, 민간업체 육성, 전문인력 양성, 관광지 조성, 홍보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웰니스 관광의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장태수 교수의 기조강연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주



웰니스 관광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향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마련됐으며,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지역의 웰니스관광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제11대 하반기 행정자치분과 의정자문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9월 25일, 행정자치분과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11대 하반기 행정자치분과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 자문에 대한 역할을 다짐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다양한 자문

과 제안을 활용한 소통창구로써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정자문위원들과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각종 현안사항과 정책제언 등 의견수렴을 위해 선진지 기관방문을 통하여 의정자문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 지역 소상공인 피해 구제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 을)는 10월 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주지역 경제를 진단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직접 듣고 지원 가능한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종합토론회에선 강성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영훈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 박인철 제

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문종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관광산업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실정”이라며,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 확산 추세는 선부른 희망을 말하기에도 어렵기에, 제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설계된 지원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사태를 ‘전대미문’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제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대미문’의 정책대안들이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도의회-도 상설정책협



의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임차보증금 활용 임차보증금 안심 대출 사업’, ‘지역 배달업 구축과 이용 할인 쿠폰 지원 추진’, “선지원 후교육”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사업이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 경제 회생방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드림타워, 사회복지 현장 찾아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2일 제주드림타워와 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양영식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방문의 경우,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준공을 앞두고 고

층빌딩에서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안전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도내 18개 사회복지 직능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활동계획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9월 1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

의회 의원, 의정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체 위원장 투표 및 분과위원장 선출,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 의원 위촉을 축하드리며 의정자문위원회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도민 소통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체 7개 분과 54명으로 구성되었고 보건복지안전분과 위원회는 6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이인옥 전문위원은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위원들이 아동, 노인, 안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현장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수정가결 등 10건 심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87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총 10건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강점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등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임사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각각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조정 및 감액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체험시설의 운영취지에 맞게 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어업인 피해 최소화, 해양생태계 영향 추가 검토'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심사를 받았지만, 결정이 보류됐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9월 24일 오후 제 387회 임시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해상풍력사업으로 어업권 축소로 인한 나잠어업인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문제, 발전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생태계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에 앞서 한동리 해녀 50여명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해녀 숨비

소리의 절절함이 살아 숨쉬는 한동어촌계 삶의 터전을 짓밟지 말라.”라며, 풍력단지 지정 반대를 촉구했다.

해녀들은 성명을 통해 “2015년 경 작성됐다는 동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유치 동의서는 한동리 어촌계원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회의록도 없는 동의서는 무효”라며, “설령 유효하다 해도 ‘동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한동 해상풍력지정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일대 공유수면 5.63㎢에서 총 사업비 6,5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총 104.5MW 규모의 5.5MW급 발전기 19대와 해상 및 지중 22.9KV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도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9월 25일 의사당 도민의방에서 상임위 도의회 의원, 의정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환경도시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제11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첫 상견례 자리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분과위원회로 마련됐고, 회의에서는 의정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

회 위원 위촉을 축하드리며 제주도의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신 공로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의정자문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기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정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SI 활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포스트코로나 제주체육이 나아갈 방향 토론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에서 열리던 각종 체육 행사가 취소되면서 스포츠산업을 비롯해 도민건강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박호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9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태범 제주대학교 교수는 ‘코로나시대의 제주 체육의 현실과 위기 극복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 분야 키워드를 비만·비대면·홈트레이닝·가상현실·스포츠용품 등을 정리했다.

서 교수는 “제주 체육교육의 현실은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학교 운영이 미흡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매칭사업 예산을 두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

며 신청도 안했다”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도 체육시설 폐쇄와 운동공간 부족 등 비대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홈트레이닝족이 증가하며 유튜브 등에서 전문 트레이너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 운동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확한 자세를 숙달하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근력을 사용하는 등 도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이미지 기반 신체 데이터 측정 기술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형 피트니스 진단 및 최적 추천 기술 ▲지능형 트레이너 기반 최적 코칭 기술 ▲인공지능 기반 개인 피트니스 효과 분석 및 코칭 기술개발 ▲블록체인 기반 개인 피트니스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등이다.

아울러 서 교수는 VR 및 IT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 개발과 전용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대회 개최, 새로운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동호인 분야에 온라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실시간 종목별 경쟁 프로그램, 학생선수과 엘리트선수 분야에 온라인을 통한 기술과 자세 훈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콘텐츠 개발은 종목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고 제언했다.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9월 25일 의사당 도민의방에서 상임위 도의회 의원, 의정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4일 제11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첫 상견례 자리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전체 위원장 투표 및 분과위원장 선출,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축하드리며 의정자문위원들

이 자문해주시는 지역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도민소통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문화·예술·체육을 통해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체 7개 분과 54명으로 구성되었고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회는 6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 활동계획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9월 1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회 의원, 의정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농수축경제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체 위원장 투표 및 분과위원장 선출,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 의정의 사각지대도 많아 우리 의정이 다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정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제언, 대안제시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의정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이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난개발 초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풍력발전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자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2년 동안 도민을 위한 자치입법 및 정책 제언,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의회-제주 스타트업 온택트(ontact) 간담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도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는 9월 23일 원도심 창업 거점 공간 W360에서 제주 스타트업 온택트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반영하여 온택트 간담회로 운영됐다. 온택트란 언택트(비대면·Untact)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사람 간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하지만 업무와 생활의 영위를 위해 온라인 연결을 확장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스타트업

현황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택트 간담회에는 도내 스타트업 중에서 제주센터 보육기업인 ㈜컨택(대표 이성희), ㈜디스커버제주(대표 김형우, 허진호), ㈜카카오패밀리(대표 김정아), ㈜휴플(대표 김홍래)이 참여했으며, 기업 소개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육위원회

제주목관아, 사적(史蹟)공원으로 활용 가능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은 9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주목관아 활용운영방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제주에서 목관아 일대는 최근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심공동화라는 대표적 도시환경의 변화를 보인 곳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목관아에서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하절기에는 야간개장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관아 주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미온적이며, 목관아에서 행사가 없을 때는 다시 침체된 도시공동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협의체를 구

성하여 직영관광지가 아닌, 목관아 담장을 허물어 개방형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주시기를 요구하였고, 도의회로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을 하였다. 청원은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다.

임덕수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문화재 활용사례를 통해본 제주목관아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고봉수 대표(주민협의체), 권정우 건축사(탐라지예), 여창수 담당관(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용호 연구원(헌디연구소), 홍미옥 교장(북초등학교), 김대근 본부장(세계유산본부)이 참여해 목관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 원도심의 대표유적이자,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보물 관덕정이 있는 이곳이 도심



희생의 요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도민들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목관아의 가치를 살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분과 하반기 의정자문위원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9월 25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의정자

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4일 제11대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위촉장 전달에 이어 위원장 투표 및 분과위원장 선출,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공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축하드리며 의정자문위원들이 자문해주시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의정자문위원회가 소

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더욱더 현장을 찾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체 7개 분과 54명으로 구성되었고 교육분과는 9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생생 의정활동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사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 용어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의회-도 간 설정정책협의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경각심이 필요한 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

뭉,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5월 앞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기후 실패(climate breakdown)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가 있으며,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개정이 불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외한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의 출몰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인간과 가까이 살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하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 지역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변경하여, 공식사회 및 지역사회 내에 기후 관련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은 향후 유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주가 추구해온 CFI 등 사회적·경제적 대전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조례개정 및 안전성 확보 필요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사진)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어촌민박시설기준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규제완화에 따른 민박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이 거론

된 것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면적 230㎡ 이내 본인이 거주하는 1개동에 대해서만 민박이 가능했던 사항을 연면적 230㎡ 이내의 경우 여러 동에 대해서 민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는데, 제주에서는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농어촌민박 관련 시설기준을 특별로 받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 농식품

부의 지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역차별(규제강화)이라며 조속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의 규제완화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제주지역 공유숙박 스타트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도 예정되는 만큼, 농어촌 민박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10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진행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통합 계정의 구성과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구성과 용도 등을 규정(안 제2조 ~ 제5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회의 등을 규정(안 제6조 ~ 제9조),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예탁의무,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안 제10조 ~ 제14조),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5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이 조례는 부공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연호·김용범·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양영식·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사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발의 배경에는 도체육회가 2020년 1월 체육회장이 도지사에게 민간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와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12월 시지부건립 등 조직체계가 확대 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진흥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과 안전관리계획,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인들은 일반체육인들과는 다른 세심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창업지원 강화 김장영 교육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장영 의원(교육위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사진)이 대표 발의하고, 송영훈·김경학·강성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이 9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는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창업교육, 창업시설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창업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장영 의원은 “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청년과 중·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과 집행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큰 문제없이 본회의 가결과 조례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 조례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인권전문가 의견수렴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 보건복지안전위·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9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 고현수)과 공동으로 ‘인권 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정책포럼의 한영진 부대표의 사회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의 발제와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이진숙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신강협 위원장,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최석윤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포럼의 고현수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발의와 스포츠폭력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인권제도화의 한 축이 될 「학생인권조례」도 발의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사회 인권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제주지역의 인권제도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인권 조례 제정 당시처럼 이번 개정안도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가 실현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희망했다.

정책포럼은 고현수 대표 및 한영진 부대표(민생당, 비례대표),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



동) 의원과 후반기 새롭게 가입한 김대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흥동)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정기총회 후반기 대표 강민숙 의원, 부대표 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은 9월 1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

고, 2018부터 2020년 전반기 활동 성과 보고 및 차기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포럼 대표에 강민숙 의원이, 부대표에 정민구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강민숙 의원은 대표 수락 인사말에서 “제주문화누리포럼을 통해 제주문화의 가치를 모색하고, 제주다운 일을 알리는 작업에 충실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문화예술계 현장의 소리에 맞는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정책방향을 수립·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반기 활동성과(대표 김용범, 부대표 문종태)로는 제주의 문화유산인 잣성의 보존방안을 비롯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주어의 대중화 방안, 인문학진흥제도 모색 등 7건의 정책토론회와 1회의 현장답사를 가졌다. 하반기에는 문화의 남북교류를 비롯하여 제주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등 여러 세부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본 포럼은 강민숙, 정민구, 강성민, 강철남, 고태준, 김용범, 김장영, 김항국, 문종태, 이경용, 양영식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활동한다.

제주 청년정책 벤치마킹, 대구와 눈높이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항국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동·2동)은 지난 9월 24일 의원실에서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과 제주지역의 청년정책 및 청년기금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용현 위원(스타트업 ‘각광’ 대표)과 최강 위원(스타트업 ‘해달프로그래밍’ 대표)이 참석했으며, 이들이 계획한 청년 정책연구의 수행과 제주 청년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제주의 청년정책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기반이 잡힌 이유에 대해 김항국 의원은 “제주 청년정책의 성

과는 지사 등 정책결정권자의 추진의지와 함께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서로 맞물린 결과로 본다.”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이지만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해줄 지역으로 성장한 것이 뜻깊으며,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청년기금이 최종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항국 의원은 제주지역에 청년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青年情談會)를 기획하여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1년 5개월 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장본인이다.



시로 읽는 제주



우리들의 하늘·2

양동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추락을

거듭해야 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들가에 핀 저

코스모스 마냥 자신의 모가지를

싹둑 잘라야만 아니 그러고도

육신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4·3이 청춘에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애월 근처 4·3 유적지를 작가와 독자들이 함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작가와 독자들이 함께 유적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는 작품구상을 하기도 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은 없고 비석이 달랑 남아있는 유적지에서 독자들은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풍경뿐인 풍경 속에 지난 세월의 감정들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간 곳은 원동마을을 지나 빌레못굴 그리고 자리왓 마지막 장소는 납읍리에 있는 4·3성이었다. 유적지를 순례하는 동안 납읍이 고향인 양동림 시인이 원동마을을 ‘원이’라 부르던, 어린시절 이야기와 함께 납읍 지역의 4·3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원동마을도, 빌레못굴도 처음 탐방하는 나는 자료집에 나온 설명을 열심히 읽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나온 자란 양동림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료집과는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 기운은 할머니집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솜이불 같은 느낌이였다.

어린시절 할머니집을 가면 할머니가 귀한 솜이불을 꺼냈다. 솜이불은 목직했고 그 이불을 덮으면 답답하지만 누군가의 장롱 속에 귀하게 간직하고 보관된 정성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원동마을 근처에서 출을 베고, 빌레못굴 근처에서 괴담을 들으며, 지금은 많이 무너진 납읍 4·3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어디까지 이어졌었다는 어린시절 이야기들은 자료집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양동림 시인은 안내서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납읍의 눈동자로 이 골목 저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 마을에서 자랐으니 그 마을에서 살다간 어른들의 입이 되어 들려주었다.

4·3전문가들을 따라 유적지를 순례하고 있지만 자료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직접 듣는 것의 의미도 크다. 하지만 후손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제1호 사형수가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나라 현대사가 얼마나 잘못된 단추를 끼우며 비극으로 치닫는지 알게 된다. 지금 옛날 서귀포 시청 앞 만나누는 산사람을 섬멸한 기념으로 심어졌다는 데 지금은 제주도 기념물 15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상길 중위는 마지막에 하느님의 범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한다. 서귀포에서 나온 자란 어린시절 그 만나누 밑 그늘에서 햇볕을 피해 친구들과 어린시절을 보내던 나의 찬란한 하늘을 떠올리니, 알수록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맑은 날 제주의 하늘은 푸르지만 하다.

글 김신숙 / 시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1회	총119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9회/78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6(목) ~7. 28.(화) (13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제385회 임시회	8.10.(월)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9월	제387회 임시회	9.16.(수) ~9.25.(금) (10일)	· 주요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8회 임시회	10.13.(화) ~10.30.(금) (18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90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청탁금지법 Q&A



Q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관련 부정청탁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확장과 적극 활용”으로, 동서활주로 지역주민의 공항소음피해를 줄이자



제주국제공항은 1941년 일제 강점기의 군비행장으로 건설되어 1968년에 제주국제공항으로 개항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까지 총 5차례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제주관광 활성화와 제주경제 발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제주국제공항의 이면에는 공항 주변지역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현 제주공항은 동서활주로를 주로 활용하여 이착륙하기 때문에, 동서활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은 도두동, 용담2동, 이호동, 외도동 등이며, 약 2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70웨클 이상 ~ 75웨클 미만)은 4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소음피해 영향이 큼니다.

소음대책지역에는 도리초, 사대부중, 사대부고, 제주서초 4개교가 있고, 인근지역에는 외도초, 도평초, 하귀일초, 백록초, 물메초, 월랑초, 제주서중 등 10개교입니다. 이 역시 대부분 동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상 서쪽으로 공항 확장을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두동에 위치한 도리초등학교는 공항 경계선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항공소음이 88웨클입니다. 이는 소음방지시설을 할 게 아니라, 이주대책이 필요한 전국 최악의 실정입니다.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라는 공동체 사회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제주관광의 선봉대 역할로, 그리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항공소음의 피해를 감내해 왔던 공항지역 주민들의 순응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를 강요하시겠습니까? 동서활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공항소음피해에 어찌 눈 감고 계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평온권을 빼앗고 있나요?

희생과 배려의 그 손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쳐다보며 분노와 저주의 돌맹이를 들고 싶은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남북활주로의 바다 쪽으로 ‘이륙 전용’ 활주로 확장 및 적극 활용을 통해서, 동서활주로 이착륙에 의한 항공소음 피해를 대폭 줄이면 됩니다.

교차활주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지난 8월 23일 ‘뉴제주일보’에 실었던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의 기고문에서 사례로 든 미국 뉴욕주의 ‘라과디아공항’의 안전성과 최고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영환 항공소음협회장은 “남북활주로 이륙 전용 활용을 통해서 사대부중과 사대부고는 현재 ‘소음대책지역’에서 ‘인근지역’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현재의 소음대책 인근지역 10개 학교 중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지난 4차례 쟁점 해소 토론회 중에서 “현 공항 확충 및 활용에 대해 검증해 보자”고 제안하며, 의견 수렴을 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기존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의 북쪽 바다를 향한 이륙 전용 확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좁고 포화상태인 제주국제공항의 확충과 고급화도 이루고, 동서활주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 등의 고통을 분산하여, 앞으로도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제주관광의 선봉대로, 제주경제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

코로나-19로 보는 주민공동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역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지역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감염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지역사회로 감염자 한명의 발생이 큰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

마을회 운영 지원 및 마을활력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전통적으로 유기적인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작은 마을 및 주민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고 더 뽄뽄 뭉치고 있다.

남원읍에서 지역 확진자가 나오자 각 마을회에서는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공지하여 공포와 혼란을 느끼는 주민들을 다독이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침착하고 빠른 대응을 하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아니다. 난세가 곁에 항상 머물렀던 영웅을 보이고 느끼게 할뿐.

예로부터 지역공동체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해쳐나갔다.

아무리 비대면의 시대가 왔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시대라고 하여도, 이번 코로나-19감염증 유행으로부터 지역공동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의 공동체들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이고 든든한 뒷받침과 더불어 행정과 지역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미란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좌남수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소통의정 구현 4.3 특별법 국회처리 전방위 행보도

“의회의 특권인식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찾아가는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추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10일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백일을 맞았다.

좌 의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쳐 적잖은 성과들을 도출해 냈다.

좌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좌 의장은 이를 위해 전국시의회의장협의회 정기 총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전국 이슈화를 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 4일 동안 전국 10개 광역의회를 방문, 제주4·3특별

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공감을 유도해 냈다. 좌 의장은 현안·현장에서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췄고, 소외된 약자들과 따뜻한 의정 구현에 총력을 다했다.

좌 의장은 이를 위해 태풍 내습에 대비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는가하면 강정마을을 운영위원회, 이장단협의회, 공무원 노조, 천막촌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벌이고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좌 의장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찬·반 단체를 모두 초청해 의견을 교환했음은 물론 국토교통부 김상조 공항정책실장 등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 두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10월부터는 민생의정의 일환으로 1차산업 종사자를 시작으로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좌남수 의장 도내 직능단체 간담회(2020.10. 7.)



▲ 서귀포항 등 태풍 피해예방 현장방문(2020. 9.2.)

4.3 특별법 국회 통과 위해 시·도의회 네트워크 구축 좌남수 의장, 전국 시·도의회 방문 강행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는 등 불(Boom)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 4·3특별법위원장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협조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전국 시·도의회 방문은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17일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부산시의회까지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방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미 지난 12일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제주4·3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을 위해 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에 협조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역사는 단순순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

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민 관심도 커

홈페이지, 전화, SNS 등을 통해 32건 수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가 10월 13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도민 불편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보름간 홈페이지, 방문상담, 전화, SNS 등을 통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32건의 다양한 생활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속오일장 자리배정 개선 요청, 도로변 불법 광고물 난립 개선, 코로나 19로 인한 격주등교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 발굴, 외부유입 유동인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쓰레기 처리문제 개선, 청년주택마련 지원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수렴된 내용을 행정자치 5건, 보건복지안전 10건, 환경도시 14건, 문화관광체육 4건, 농수축경제 7건, 교육위원회 5건(중복반영)으로 분류하고 소관 상임위 별로 회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토록 했다.

3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행정자치, 우수 보건복지안전, 장려 총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3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우수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장려에 총무담당관실을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된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관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부여로 순위를 가

리게 된다.

한편, 지난 2분기 평가 최우수에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우수에는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선정되었으며, 상반기 최다 기고왕에는 보건복지전문안전위원 강성택 주무관이 선정 시상된 바 있다.

오대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홍보 유도해 나가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절 물가 수급상황 파악, 상인 애로사항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전통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정민구·강연호 부의장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5일 동문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명절 물가 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도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주용품을 구입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부공남 교육위원장,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오영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도 동행했다.

“제주 지역화폐 경제효과 크지 않을 것”

정책연구실, 현안보고서 16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9월 22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 제16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작고, 다른 지역과의 소비 인접성도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 소비로 전환하는 ‘지역 간 소비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백화점이 없는 제주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 등의 매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이 때문

에 대형 유통기업 등의 매출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등으로 전환되는 ‘소비 채널 전환 효과’도 비교적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도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어 역외 거주자의 소비 유인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